

#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26. 6. 15. (월)

총 4페이지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는  
오늘부터 전국 16개소 각 기관의 이름으로  
릴레이 성명 발표를 시작한다.**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솜  
[www.teen-up.com](http://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 성명서

아동·청소년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는  
현장을 방치하며, 국가가 말하는 미래는 기만이다

- ‘성착취(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는 시설 전환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16개소 릴레이 성명 발표를 시작한다. -

### 1. 기술의 진화 뒤에 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멈춰라.

최근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청소년 이용불가(19금)’ 등급 상향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는 X가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을 고수하고, 자체 AI 챗봇 ‘그록(Grok)’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부적절한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생성·유통하며 아동·청소년을 유해 환경에 방치해 온 것에 대한 국제 사회의 준엄한 제동이다.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끝없이 발생하는 성착취 피해를 목격해왔던 우리는 이번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존엄의 보장이야말로 거대 빅테크 기업의

‘표현의 자유’ 나 자본의 ‘이윤 추구’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명백히 보여준 뜻 깊은 결실 중 하나라고 본다. 이에 올해 초부터 X의 AI 기술 악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규제책을 마련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무관용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대형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 제재라는 가시적 성과 이면에는,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기술 매개 성착취 범죄와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독한 무관심과 방임, 그리고 뼈아픈 모순이 숨어있다. 대형 플랫폼 뒤로는 무수히 많은 중소형 앱, 보안 메신저, 다크웹 등 변종 디지털 매체가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겨냥하며 잔혹한 성착취 범죄가 가능하도록 교묘하게 증식하고 있다. 규제의 칼날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암약하는 변종 매체들도 여전하다. X에 대한 이번 조치는 이들 사각지대의 범죄 매체들에게 또 한 번의 반사이익을 안겨 줄 계기가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기술 선진국이다. 기술진화가 빠른 만큼,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 범죄와 피해 또한 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월등하고 다양하며, 빠른 전달 속도와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그것이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은 물론, 우리 아동·청소년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상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자기 나라의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다. 부끄럽고 낭패스러운 일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그저 국제사회의 흐름에 편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기술적인 종합 대응책을 지금, 바로 마련해야 한다.

2. ‘한 인간의 세계를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엄청난 무게의 일을 단 3명의 상담원에게 전가해 온 것은 국가가 현장의 사명감과 헌신을 무임승차하며 착취해 온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범죄가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질 때까지 최전선에서 상처받은 아동·청소년들의 삶을 온몸으로 받아내 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대하는 국가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태도이다.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 17개소에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현장의 상담원들은 온라인 그루밍, 사진·영상 제작, 유포, 협박, 성폭력,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얽힌 아동·청소년들의 복합적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은 물론 주거, 학업, 일자리, 부모 상담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피해 아동 한 명이 최소한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제공되는 직접 지원 기간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아동·청소년이기에 이들의 주변인들과의 관계성 회복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는 현장의 업무는 피해 아동 한 명에게 투여되는 만남의 횟수, 시간, 비용 측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대하다.

그러나 이 모든 복합적이고 중대한 책임을 국가가 단 ‘3명의 상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3명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우리는 2020년 개소 이래 현재까지 “최소한 5명이라도 상담원을 확충해 달라”고 처절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번번이 “인력 충원은 안 된다”는 행정 편의적 논리와 우선순위 타령을 반복하며 우리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여기에 더해, 엄연히 법률적으로 규정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시설’이 아닌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단기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신분 불안정성과 경력 불인정 등 악조건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버티던 상담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6년을 기다려왔다.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는 주범은 다름 아닌 정부의 심각한 무관심과 재정 당국의 무감각함이다.

정부에게 묻는다. 국가가 말하는 우선순위는 정작 무엇인가?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면제해주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다고 부르짖지만, 그 미래는 과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정부의 방임과 무책임 속에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착취로 병들어 간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정부는 지금 당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최소 5명의 상담원 확충 예산을 편성하고, 불안정한 ‘사업’이 아닌 법적 고유 ‘시설’로 전격 전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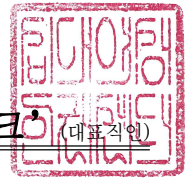
우리는 오늘 전국 16개소 각 기관의 이름을 건 릴레이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기술 권력과 행정 나태에 맞선 처절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만약 우리의 이 마지막 외

침마저 기재부의 못 박힌 논리에 막혀 무시된다면, 전국 16개소 지원센터 모두는 사업증을 국가에 전면 반납할 것을 결단하고 배수진의 자세로 연대할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의 존엄을 구하는 일에 국가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디지털 기술 매개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 온전한 안전망과 지원 체계를 확충하라.<끝>

2026. 6. 15.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참가단체 총 16개소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부산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대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인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광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대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울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강원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충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경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경남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제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특성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